## 기방시대 매거진

Vol 121



Vol 121

## 기방시대 매거진

2024. 09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9월 10일(제121호)

발 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 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 의** 02-2170-6092

편 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 기방시대 매거진



**Vol. 121** 2024, 09.



## **CONTENTS**

#### ┌ 시도지사 칼럼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 위해 도전의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때

#### ┌ 2024년 역점과제

- ▶ 미래개척,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전
- ▶ 문화활력으로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대전
- ▶ 생활안정, 더 나은 삶을 함께하는 대전
- ▶ 공간혁신으로 삶의 공간이 더욱 빛나는 대전

#### ┌ 대전의 주요정보

- ▶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좋은 명소 (계족산 황톳길, 장태산자연휴양림, 만인산 자연휴양림)
- ▶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 ┌ 대전광역시 우수사례

- ▶ 0시축제... 5년 이내 아시아 1위 · 세계 3대 축제 반열 꿈꾸다
- ▶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 ▶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선정.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거듭 기대

#### ┌ 의회소식

- ▶ 교통 불편 민원 '대전시의회 신속 해결'
- ▶ "특별재난피해지역 선포 의회 차원 적극 지원"
- ▶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 ▶ 「대전0시축제」 대전지하철 안전 우리가 지킨다

#### ┌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아이빔테크놀로지 김필한 대표

## ┌ 정책포커스

- ▶ 우리나라 빈집정비에 관한 제도 고찰과 정비 · 활용 방향 설정
- ▶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 시도지사 칼럼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 위해 도전의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때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 시도지사 칼럼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 위해 도전의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때



한 TV프로그램에서 자녀가 나이 마흔을 훌쩍 넘겼지만, 사회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을 시청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미덥지 못했던 부모는 자녀의 결정을 대신해 왔고, 자립심을 제때 키우지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안주하는 서글픈 굴레의 연속이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며, 중앙정부와 수도권 일극체제, 그리고 지방의 관계가 떠올랐다. 정확히 말해, 1948년 제헌 헌법부터 규정된 나이로 보자면 76살의 지방자치, 1991년 지방의원선출을 부활로 보자면 33살에 접어든 지방자치가 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강력한 중앙 통제를 통해 이룩한 성공 신화와 지방의역량에 대한 불신에 묶여 성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시대의성공 공식은 달라졌고,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사회 등 지역 구성원의 역량도과거와 같지 않다. 지방정책에 한해서라면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의 현황을훤히 꿰고 있고,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지방정부가 가장 실효적으로 정책을추진할 수 있다.

중앙 주도 대응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에 소진한 예산이 200조 이상이지만 반등의 기미도 없이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신생아 수 43만 8천 명을 기록한 이래. 단 8년 만에 20만 명의 신생아가 사라졌다.

대전의 경우, 2023년을 인구회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 여건을 철저히 분석해. 올해 돌봄과 양육.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 도시 매력 향상 등 5대 분야 91개 사업을 구체화해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에 나섰다.



특히, 만남과 결혼, 정착, 출생 정책을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틀에 담아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시민이 더 쉽고 친숙하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재 대전은 인구 부양의 근간이 되는 혼인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4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44.1%가 올랐고, 이어진 5월에는 무려 52.7%가 올라 두 달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9로 아직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정도지만, 분명 지방정부 주도로 인구 반등의 요건을 충실히 갖춰나가고 있다.

'대전 0시 축제'도 우리 대전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93년 대전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와 꿈순이를 시조로 삼아 꿈씨패밀리로 확장했고, 과학수도 대전을 대표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카이스트와 같은 관내 과학기술 기관들과 협력해 최신 연구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개성이 가득 담긴 프로그램들로 축제를 채워 나갔다.

개최 두 번째 해인 올해, '대전 0시 축제'는 200만 방문객을 넘어섰고 4,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기긴 안전사고와 바가지요금이 없고, 청결한 도시환경까지 지켜 낸 최고의 축제를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냈다.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에는 대전 동구 청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처음 '0시 축제'를 구상하고 추진해 봤던 과거의 경험도 큰 역할을 했다. 지방의 역량은 이제 부족하지 않다. 다만 독자성을 살릴 수 있는 도전의 기회와 경험의 축적이 필요할 뿐이다.



물론 중앙정부도 과거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접어들어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는 한편, 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구 지정 등 지역이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 ·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어 반갑다.

대표적으로, 17개 시도의 합동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단순히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삼았던 지방자치단체 실 · 국 · 본부 설치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전도 지난 7월 1일, 18국 77과 301팀의 조직개편을 단행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국방, 나노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정조준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구조를 갖출 수 있었다.

또한,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와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에 연속 선정되어 민선8기 대전 시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양질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큰 동력을 얻었다. 앞선 2년 동안에도 LIG넥스원, SK온,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사 등 72개 기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 낸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약속되면서 더욱 많은 우량기업들이 대전에 투자를 결심하고, 대전 고유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변화의 속도에 아쉬움이 있다. 지방을 재건하고, 미래 국가성장 동력을 제 시간 내에 확보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간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 정책의 틀을 깨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지방의 순수 자체 재원 사업에 한해서라도 상급기간의 심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자체 재원이라도 모두 상급심사 대상이었던 문화 · 체육시설과 청사 신축이,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지만 대전시가 명품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의 '先디자인, 後사업계획' 방식을 실제 적용하는 데 여전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방의 존속이 달린 출산 장려와 인구부양 등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때마저 제약이 크다. 지난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 10억 원 이하 사업에 한해 상급기관의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협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전시 총 재원이 7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현시점에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회보장 사업 예산의 신속협의 상한액을 연 1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자체 재원까지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또한, 지방정책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절차가 확대되어야 한다. 일례로, 8월 통보된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집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 범위를 단순 유지준설에 국한함으로써 홍수 재난 예방에 영향력이 큰 정비사업준설 시행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지침대로라면 시민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준설에 2~3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소요되게 된다. 협의 과정이 없어 발생한 혼선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앙집권체제 국가였던 프랑스는, 1982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행사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감독권한을 폐지하고 사후 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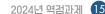


행위에 대한 행정법원 제소권만을 남겼다. 나아가 2003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결정권과 자율 행정권, 입법권 등 강력한 권리를 보장했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22개에서 13개로 축소 통합하고, 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메트로폴 11개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이제 권역별 초광역 자치단체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 헌법적 권리를 뒷받침할 방안이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9월 10일, 첫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실감한 문제의식을 여러 광역자치단체장, 장관들과 직접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다. 상정 안건이 평균 3~4건에 불과하고 연간 1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국토의 새로운 틀을 짜는 지방시대, 그 거대한 시대적 과제 완수를 하루라도 앞당길 과감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2024년 역점과제

미래개척,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전 문화활력으로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대전 생활안정, 더 나은 삶을 함께하는 대전 공간혁신으로 삶의 공간이 더욱 빛나는 대전



## 미래개척,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전

대전은 대전역, 대덕연구단지, 정부대전청사 등을 기반으로 교통·과학·행정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중부권 최대 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 저출산 고령화 지속, 경제·산업구조 취약 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대전이 지닌 역량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일깨워 대전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거점을 확충하는 등 경제기반을 다지고,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창의와 도전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의 엔진이자 심장인 산업단지를 500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확충하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반도체 클린룸 구축,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건립,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4대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계획이다.

K-켄달스퀘어 조성, 마중물플라자 조성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실증테스트베드 플랫폼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 문화활력으로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대전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문화와 여가에 대한 기대와 인식, 그리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 문화와 여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고, 문화와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문화와 여가는 삶의 일부로 이해되고, 더 나아가 도시 경쟁력 핵심요소가 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문화 ·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촌근린공원 일원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등을 집적한문화거점공간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도 조성한다.









지식정보문화를 확산을 위해 대전대표도서관, 동대전시립도서관, 서대전시립도서관 건립도 추진한다. 이종수 미술관, 제2대전문학관, 대전학발전소,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건설은 물론 생활체육시설을 집적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구축, 사회인야구장, 축구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문산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0시 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더 크게 키울 계획이다.

## 생활안정, 더 나은 삶을 함께하는 대전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변하고,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기반마련은 도시 공동체 통합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사회안전망을 더 넓고,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가족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원인 대전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 환자 친화적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온마음병원을 이전 · 신축과 안전체험이 가능한 대전국민안전체험관도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돌봄제도 미적용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영양급식, 주거편의 등을 지원하는 대전형 통합돌봄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정책 종합 컨트롤타워인 대전청년내일재단도 운영하며, 사회복지회관 건립으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네트워크 거점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 공간혁신으로 삶의 공간이 더욱 빛나는 대전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도시공간도 달라진다. 직주락, N분 생활권 등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효율적인 도시 공간과 어우러지는 명품 건축물을 조성하여 대전을 매력 있고 찾고 싶은 글로벌 브랜드 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상업 · 업무 · 주거 · 문화 · 컨벤션 기능을 집적한 대전역세권 복합 개발과 대전역세권 구역과 선화구역에 고밀도 복합혁신 공간 도심융합특구를개발해 나갈 것이다.

보훈복합커뮤니티센터, 보훈휴양원 등 보훈문화복합단지 호국보훈파크조성과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및 식장산역 신설, 도시철도 2호선 최첨단 친환경 수소트램 건설, 도시철도 3 · 4 · 5호선 추진 등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 자율주행차, PM, UAM 등 미래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대전역 일원에 건립하고, 여객수송 본연의 기능에 주력하여 유성복합터미널을 조기에 건립할 것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체계를 확충 및 보문산 권역에 산림복지·휴양단지를 조성과 호동 일원에 제2수목원을 조성하고 한밭수목원의 명품화와 생태휴식공간 노루벌 국가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대전의 주요정보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좋은 명소 (계족산 황톳길, 장태산자연휴양림, 만인산 자연휴양림)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좋은 명소

#### 계족산 황톳길

여행 전문기자들이 선정한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2008년)'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5월에 꼭 가봐야 할 명소(2009년)' '한국관광 100선(2014~2015년)'에 빛난 계족산 황톳길. 계족산(429m) 장동산림욕장에서 시작해 임도 삼거리와 절고개를 거쳐 이현동 갈림길까지 총 14.5km를 맨발로 걷는 전국 최초의 건강 여행길이다. 발은 신체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 불린다. 맨발로 계족산 황톳길을 걸으면 발바닥을 자극해 그에 상응하는 신체 기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 체온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강해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유엔 환경 어린이 회의에 참석한 100개국 500여 명의 외국 어린이들과 세이셸공화국 미셸 대통령이 맨발로 걷고 극찬한 곳이기도 하다. 매년 5월 둘째 주 주말(토 · 일)엔 계족산 맨발





축제가 열린다. 맨발 마라톤, 숲속 맨발 걷기,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수많은 마니아들이 찾는 대전의 대표 힐링 축제다.

#### 장태산자연휴양림

하늘 높이 솟은 메타세쿼이아가 아름다운 장태산 자연휴양림. 전국 최초로 민간인이 조성하고 운영한 휴양림은 2002년 대전시가 인수한 후 새롭게 리모델링을 거쳐 2006년에 재개장했다.

자연 상태의 장태산을 배경으로 평지에 밤나무 · 잣나무 · 은행나무 · 소나무 · 두충 등의 나무와 미국에서 들여온 메타세쿼이아 · 독일 가문비나무 등의 외래 수종을 계획적으로 심어 숲을 조성했다. 휴양림은 아름다운 숲을 찾아온 방문객을 위해

휴양림은 아름다운 숲을 잦아온 방문객을 위해 생태연못, 교과서식물원, 숲속 어드벤처 등 여러







시설도 준비해 놓았다. 단연 최고의 인기는 '숲속 어드벤처'. 그 안에는 메타세쿼이아 숲과 눈높이를 맞추며 걸을 수 있도록 설치된 '스카이웨이'와 아름다운 휴양림 전경을 볼 수 있는 스카이타워가 있어 방문객이 많이 찾는 코스 중 하나다. 또한 휴양림이 마련한 숲 해설프로그램인 '숲 체험'은 단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신청할 수 있다.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과 여러 편의시설도 구비돼 있어 자연을 벗 삼아 하룻밤 머물며 추억을 쌓기도 좋다.

#### 만인산 자연휴양림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대전광역시와 충남 금산군 경계로서 대전역에서 17번 국도 17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주봉인 만인산을 비롯하여 봉수레골, 큰배골, 작은배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산세가 수려하여 태조대왕과 왕자의 태를 모시기도 하였던 곳이다.

골짜기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흘러 내리고, 활엽수가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도시 근교 휴양림으로 자연 능선을 이용 가족 휴양지구, 청소년



지구, 피크닉 지구 등으로 나누어져 조성되어 있어 도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이다.

만인산휴게소는 1990년도에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로서 건축 당시 전혀 산림훼손을 하지 않고 자연

계곡을 그대로 이용 하여 골짜기에 테크시설을 만들고 지상 2층. 반지하 1층으로 건축되었으며, 주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주재료는 목재로 건축하고 휴게소 앞에는 연못을 조성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건축함으로써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의 휴게소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으며, 지금은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하여 즐겨 찾는 명소로 정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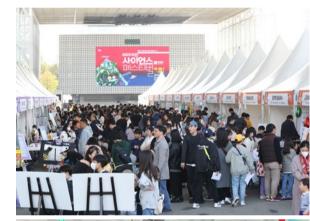
곳곳에 휴식용 벤츠, 편안한 쉼터가 설치되어 있어 풍광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만인루각은 만인산의 상징적인 휴양 건축물이며, 루정(樓亭)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이루각의 건축은 서울 북악산 기슭에 있는 세검정(洗劍亭) 건축양식을 취하되 주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붕은 목조 와가 2층으로 응용 건축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 건축양식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건축되었다.

####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대한민국 과학 수도' 대전의 대표 과학문화축제인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2000년부터 개최하여 금년으로 27회째를 맞이한다. 2024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오는 10.  $18.(금) \sim 10.20.(일)까지 3일간 엑스포시민광장, DCC · 한빛탑,$ 특구·원도심 일원 등에 개최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이룩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과와 우수한 기술을 더욱 다채롭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다.

금년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장(Science), 과학 체험·교육의 장(Experience), 재미있게 즐기는 과학 · 문화 놀이의 장(Frolic),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상생의 장(Assistance)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의 주요 테마로 지역 우주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하는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도시를 향한 '대전 SAT(위성) 프로젝트'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VR · 메타버스 체험하기,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원자로 홀로그램, 미래바다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있고 ▶영재페스티벌과 대전수학축전, 해커톤 대회 등 미래인재 과학기술 경연과 ▶과학놀이터, 전문가 특강 및 청년인재 발굴을 위한 멘토링 등 과학기술 진로탐색





등이 마련된다. 또한 공연, 강연, 사이언스투어, 야간관광, 열기구 탑승 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대전시에서는 과학기술과 문화, 지역경제와의 협업을 위하여 지역 기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우수사례

0시축제... 5년 이내 아시아 1위 · 세계 3대 축제 반열 꿈꾸다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선정.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거듭 기대



## 이시축제... 5년 이내 아시아 1위· 세계 3대 축제 반열 꿈꾸다

대전 0시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초대박 흥행몰이를 하며 지난 17일 폐막한 가운데, 국내 축제 중 단일기간 최대 방문객인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는 올해 0시 축제의 성과로 ▲국내 축제 중 단일기간(9일) 최대 방문객 기록 ▲2년 연속 안전사고 · 쓰레기 · 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 달성 ▲축제로 인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원도심 경제를 살린 경제 활성화 축제를 꼽았다.

축제 방문객은 200만 명은 지난해 110만 방문객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방문객 수는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를 활용해 축제 기간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전시 이외 지역의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 중 4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름휴가를 도심으로 오게 만들겠다는 역발상에 기인한 대전 0시 축제가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갔음에도, 2년 연속 안전사고 · 쓰레기 · 바가지요금 없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시민들의 수준 높은 질서 의식과 체계적인 안전 · 환경 · 경제 대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축제를 통해 대전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 유튜브 등 SNS의 축제 홍보 게시글의 조회수는 1,159만을 넘어섰고, 일반인의 SNS에서는 한 달 동안 축제와 관련된 게시글이 7,461건에 달했고, 유튜브는 1,398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전 0시 축제의 주된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번 축제로 활기를 잃어가던 원도심 경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며, 축제로 인한 총 경제적 효과를 4,03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직접 효과는 1,123억 원이고, 지역산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9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올해 미흡했던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완성도 높은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대전 0시 축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 5년 이내 아시아 1위 · 세계 3대 축제 진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창업 · 벤처생태계 조성과 창업 · 벤처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대전투자금융(주)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여건 악화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벤처투자 66.8%, 창업투자사 80% 등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전은 대덕특구, KAIST 등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첨단기술창업이 활발한 만큼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와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행안부 설립 동의를 받았고, 5월에는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 제정했다.

대전투자금융(주)의 설립형태는 대전시 출자기관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며, 자본금 500억 원은 대전시가 100%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 원은 자금운용의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모(母)펀드 자금으로 조성한다.

운용자금은 설립 후 5년('24~28년)까지 약 3,0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30년까지는 5,00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투자금융(주)의 주요업무는 지역의 유망 창업·벤처기업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제공하여 벤처투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직접+간접투자)와 융자(투자보증연계, 市 특별출연)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선정.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거듭 기대

대전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특화단지에 지난 6월 최종 선정되었다. 대전 혁신신약 특화단지는 기존 산단인 신동ㆍ둔곡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 그리고 신규 산단인 탑립ㆍ전민지구와 원촌지구 등 총 4개 단지로 면적은 약 270만 평에 달한다.

대전시는 4개의 단지를 소부장, 신약개발, 품질검증, 글로벌 비즈니스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알테오젠, 머크 등 30개 사가 입주

예정인 신동 · 둔곡 지구는 후보물질 발굴, 소부장 물류허브로 조성하고.

바이오니아 등 73개 사가 자리 잡은 대덕테크노밸리는 신약 연구개발의 첨병으로 활용한다.

바이오오케스트라 등 20개 사가 입주 예정인 탑립 · 전민 지구에는 다품종 소량 제조생산, 품질검증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수처리장 완전 이전으로 조성될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로 조성한다.

대전 바이오 특화단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혁신신약 클러스터 도약」이고, 세계 대표의 혁신신약을 '기술에서 제조'까지 특화단지에서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글로벌 임상 3상 10개 진입,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의약품분야 소부장 국산회율 20%, 민간직접투자 9조 원, 매출액 10조 원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단지 추진으로 얻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는 6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만 2천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더하여 대전시 산업구조 재편과 전후방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대전 바이오산업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 글로벌 바이오 혁신신약 클러스터로 도약 대전시 4개 산단, ္ 💝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3조 2,867억 원 891만m<sup>i</sup>(270만 평 / 유성구 소재 4개 산단 1단지 `23~32(秦 10년 바이오의약품 단백질 세포 유전자 재생







## 의회소식

교통 불편 민원 '대전시의회 신속 해결'
"특별재난피해지역 선포 의회 차원 적극 지원"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대전0시축제」 대전지하철 안전 우리가 지킨다



## 교통 불편 민원 '대전시의회 신속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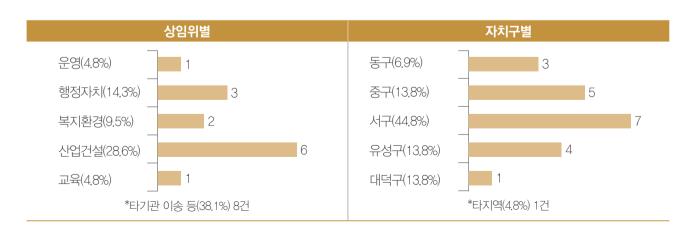
#### 2분기 민원 분석 결과



대전시의회가 올해 2분기(4~6월)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2분기에 접수한 총 21건의 민원을 살펴보면 도로파임(포트홀), 버스 대기시간, 오토바이 단속, 좌회전 신호시간 등 대부분 도로 · 교통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2분기 민원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8.6%, 행정자치위원회 14.3%, 복지환경위원회 9.5%, 교육위원회 4.8%, 운영위원회 4.8%를 각각 차지했다. 그 외 자치구 등 타 기관 이송 민원은 38.1%다.



#### 의회소식 29

## "특별재난피해지역 선포 의회 차원 적극 지원"

#### 지난여름 극한호우 피해지역 대전시의회 현장방문 정뱅이마을 · 유등교 현지 시설점검, 피해주민 위로

대전시의회는 지난여름 수마가 할퀴고 간 정뱅이마을 주택 피해 현장과 폭우로 교각이 침하된 유등교 수해피해 지역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을 위로했다.

최근 극한호우 피해가 발생한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은 7월 12일 방문해 수해 피해 실상을 살피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어서 7월 19일 조원휘 의장과 동료 의원들은 폭우로 교각이 침하된 유등교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시설점검에 나섰다.



조 의장은 "유등교 침하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복구를 서둘러 주기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 제280회 임시회 17일간 일정 마무리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원회 의장은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행복과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전0시축제」 대전지하철 안전 우리가 지킨다

#### 축제개막 앞두고 이용객 집중 안전관리 당부 대전지하철내 냉방 시설 및 환기시스템 점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다가오는 대전0시축제를 앞두고 시청역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8월 7일에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금요일부터 개최되는 대전 0시축제가 중앙로(대전역~옛충남도청) 일원에서 차없는 거리로 운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동안 도시철도 이용객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냉방 시설 및 환기 시스템 점검에 중점을 두어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아이빔테크놀로지 김필한 대표편** 김지민(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19기)



생체 내에서 살아있는 세포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올인원'일체형 생체현미경(IVM)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아이빔테크놀로지 김필한 대표님을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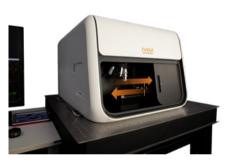
#### ㈜아이빔테크놀로지 간단한 기업 소개

저는 카이스트(KAIST) 의과학대학에서 2010년부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이빔테크놀로지는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개발한 '생체현미경'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2011년에 카이스트 교원 창업기업으로 출발하였고, 201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체현미경'을 판매하며, 국내외 여러 제약사, 바이오기업, 연구소 등에 생체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많은 연구장비 중 왜 '생체현미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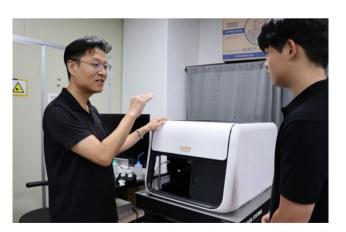
생체현미경은 연구실의 주요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체현미경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일반 현미경은 주로 조직검사나 세포 관찰에 사용되지만, 생체현미경은 살아 있는 생명체의 세포와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제가 2005년 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하버드 의대로 박사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체현미경 기술의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의학 분야에 진입했으며, 이후 2010년에 카이스트(KAIST)로 돌아와 이 기술을 상업화 수준까지 발전시켰습니다.

#### 연구장비, 그중 현미경 분야에서 아이빔의 생체현미경이 우수한 점은?

저희 생체현미경은 살아 있는 조직과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생체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생체는 심장이 뛰고 숨을 쉰다는 점인데,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몸의 움직임이 그자디 크지 않지만 미세한 세포를 구분하는 현미경 수준에서 항상 크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시숨을 참는 이유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체현미경은 MR와 비교해 100배 이상의 정밀한 해상도를 제공하며, 살아 있는



생체의 빠른 움직임을 정확히 영상화하고 이를 고정해 정밀한 해상도를 구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합니다. 주요 차별점으로는 ① 고속 레이저 영상 촬영이 가능한 생체현미경과 ② 모션 조정 알고리즘을 통한 움직임 제거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 많은 스타트업들이 목표로 하는 IPO(기업공개) 성공 이후, 다음 목표는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생체현미경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아이범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을 알게 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유통망과 마케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주로 저임상 동물모델에 사용되는 생체현미경 영상 기술을 인체에 적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암 수술 환자의 암세포를 감지할 수 있는 정밀 영상을 제공하는 의료기기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 국내 유사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IPO까지 성공하며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극복 방법은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술 자체이며, 연구실 수준의 기술을 상업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인력으로, 기술개발, 세일즈, 마케팅,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금입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맥과 리크루팅 회사 등을 활용하여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 많은 연구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위치를 대전으로 한 이유

아이빔테크놀로지의 본사가 대전인 이유는 카이스트(KAIST) 내부에서 시작한 기술로 창업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카이스트(KAIST) 출신의 연구원들을 모셔와 대전에서 시작하였고, 대전에는 정부 및 기업 연구소와 기술 기반 회사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전은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관련 바이오 회사들이 많아 유리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점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회사를 운영하며 대전시에서 도움을 준 부분은

대전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전 테크노파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초기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받았으며, 북미, 중국,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스케일업 과정에서 성장사다리 사업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컨설팅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이빔테크놀로지 명칭의 이유

'아이빔테크놀로지'의 명칭은 'InVivo Image Microscope'의 약자인 'IVIM'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기존의 'IVIS'라는 용어는 생체이미징 시스템을 의미하지만, 저희는 이보다 훨씬 정밀한 해상도를 제공하는 현미경이므로 Microscopy의'M'을 붙여'IVIM'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회사이름 등록 과정에서 유사한 이름이 있어'테크놀로지'를 추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이빔'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매거진'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과 생활비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4년 동안 대전에 거주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졸업 후 대전에 남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부족하여 젊은 층이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연구단지와 관련된 기술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좋은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포커스

우리나라 빈집정비에 관한 제도 고찰과 정비 · 활용 방향 설정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빈집정비에 관한 제도 고찰과 정비·활용 방향 설정

#### 1. 빈집과 제도

빈집 증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더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도에서 이를 정비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sup>1)</sup>이 제정된 2017년 경이다.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빈집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고, 여러 문제의식속에 빈집을 정비하여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을 제정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빈집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선호에 벗어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주거환경의 질이 좋지 않거나, 더 우선순위에 있는 주택을 소유·거주하고 있거나,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낮거나, 재산으로서 가치가 크지 않은 것 등이다. 특히 이러한 빈집이 모여서 형성되는 빈집밀집구역은 빈집 비율이 높고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큰 지역(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0조)으로 규정되는데, 시장·군수는 제도에 근거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도가 제정되던 2017년 무렵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추산된 빈집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특례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데,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빈집은 실태조사 시에 그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구분하는데, 대체로 빈집정비계획의 사업추진계획은 양호한 1, 2등급의 빈집을 활용하고 활용이 곤란한 3, 4등급의 빈집을 철거나 정비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 2 빈집과 현실

빈집정비에 대한 여러 선진 사례를 다수 검토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빈집특례법은 실제 정비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제도 제정의 어려움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빈집의 주인을 특정하여 의사를 타진해야 하는 일선의 사정이 그러했다. 특히 3, 4등급의 빈집의 경우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의 경우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빈집 중 위생, 위험, 경관적으로 지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행정이 집행을 대행하고 비용을 소유자에게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거는 가능하나<sup>2)</sup>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지발적으로 철거하는 소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철거 비용으로 소요되는 예산 문제, 법적 다툼 가능성 등으로 지자체는 빈집 철거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세금도 고려사항 중의 하나인데, 빈집을 철거할 경우 주택세 대신 토지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토지세의 세율이 주택일 경우보다 높다.<sup>3)</sup>

철거나 정비 대상이 아닌 빈집의 활용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에 근거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도 이를 거래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여 공개하기 어렵고, 어떤 집이 빈집인지 알려줄 경우 오히려

<sup>1)</sup> 이 법의 약칭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지만, 본 고에서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여 빈집특례법으로 정리함

<sup>2)</sup> 해당 내용은 2021년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농어촌 빈집의 경우 2024년부터 이행강제금제도가 실시됨

<sup>3) 2024</sup>년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5년간 주택세 인정 등을 포함하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함

점책포커스 37

범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이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내 동네의 선호도를 가늠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주변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빈집 뱅크 제도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 지역과 조건을 검색하면 그에 맞는 빈집의 사진과 가격, 상태 등을 알 수 있지만 우리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 3. 빈집과 정비·활용

지금까지 국내에서 빈집을 정비 ·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특히 공공에서는 빈집을 일정 기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차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보육이나 지역 사랑방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매입하여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철거하여 주차장이나 텃밭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

조금 더 확대하여 국외 사례를 보면 빈 주거용 건물을 매입하여 민간 계획가나 예술가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대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빈집을 다양한 수익시설로 개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빈집을 매개로 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분명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은데, 특히 부동산 특성상 공공재원이 다수 소요되는데 점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고 신축 주택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현 상황, 사회구조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나 효과는 한정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 4. 빈집과 미래의 공간을 위한 방향 설정

빈집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벗어나 있는 것에 있다는 점에 다시금 주목해 볼 때, 계속해서 빈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현시점에서 해당 주택이나 주거환경이 사람의 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이미 선호에 벗어나 있는 것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선호를 주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는 굳이 빈집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빈집이 위치한 지역을 시장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무결한 해결책이 되겠지만 자연적 기다림 외에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이 지점이 공공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최근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한 명의 소유주)이 지방의 빈집을 여러 채 매입하여 예술적 가치를 갖춘 다양한 상업시설로 활용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었다는 영상을 접한 바 있다. 그냥 그 집이 좋고 지역의 느낌이 좋아서 내려왔는데 그의 예술성이 지역에 영감을 주면서 이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추가로 그 지역의 빈집을 매입하여 이전, 하고 싶었던 바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다. 흔치는 않겠지만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빈집의 상태가 양호하고 또 한옥 형태 등 역사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면 선택 기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의지와 생각에 달린 우연한 일이겠지만, 빈집과 리모델링하여 살아보고 싶은 사람을 연계해주는 시스템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적 영역에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올해 시행된 세컨드홈 제도도 빈집을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친구하게 다가갈 방법이라고 생각하던, 다만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부담은 존재한다.

이외,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이 주거에 부적합할 경우 이를 빠르게 대지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이후의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빈집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현상이고, 장기화할 것이며, 그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빈집이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선택받지 못할 수준의 빈집을 빠르게 철거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제시하여야 효과가 좋을지, 우리나라 빈집의 현실에 맞는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고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성훈** 경북연구원

##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회지표(social indicator)가 폐교재산<sup>1)</sup> 발생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대목은 지방소멸화 심화 지역과 폐교재산 발생 지역은 매우 중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까운 미래에는 폐교재산 발생의 증가 및 그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될 전망이다.

국내 폐교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국 폐교재산 수는 총 3,955개 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폐교재산 중에서 매각 완료는 2,609개 소(66.0%), 보유 중은 1,346개 소(34.0%)로 확인된다. 즉 폐교재산의 소유자인 교육부(지방교육청)가 폐교재산 관리·운영 차원에서 매각 처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민간사업자에게 대부(임대) 또는 교육부(지방교육청)의 자체 활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 〈표〉 전국 폐교재산 운영 · 관리 현황(2024년 3월 기준)

전체 폐교재산 (단위: 개 소) (A+B)		매각 완료 폐교재산 (A)	보유 중인 폐교재산(B)					보유 폐교재산의
			활용			미활용	ᅰ( )	대장가격
			대부(임대)	자체 활용	소계(a)	소계(b)	계(a+b)	(단위 : 천 원)
계(개 소)	3,955	2,609	535	444	979	367	1,346	2,099,365,245
비중(%)	100.0%	66.0%	13.5%	11.2%	24.8%	9.3%	34.0%	

자료: 교육부지방교육재정알리미홈페이지(https://www.eduinfo.go.kr/)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까지 교육부(지방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폐교재산 활용 관련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교육부(지방교육청)는 지역사회 내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서 재산 소유자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폐교재산 운영 · 관리 상의 비효율성 · 비전문성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부(임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 등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활용방안도 동시에 모색한다는 기조로 점차 선회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정책 차원에서 폐교재산 활용을 통해 지역성장발전 및 지역활력증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정책기조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지방교육청)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폐교재산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폐교재산 활용방안 수립 및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큰 이견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폐교재산 현황,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토대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폐교재산 활용범위를 민간사업자에게 편의 및 문화시설로 임대(대부)하는 방식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다양한 산업분야 클러스터 또는 실증단지로 구축하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전라남도 해남군은 2023년 11월에 농업법인인 'H&B아시아'와 협력사업으로 폐교재산인 화산남초등학교에 부지면적 2만 여㎡와 건물 1,585㎡ 규모로 과수 실증센터 및 실증재배하우스를 갖춘 과수실증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이는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외부기업의 투자지금을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폐교재산의 리모델링

<sup>1 「</sup>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폐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하며,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검책포커스 39

및 운영에 필요한 지금 문제를 기업유치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 사례는 대외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되어 2024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둘째, 교육부(지방교육청)는 활용 가치가 낮은 폐교재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고, 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4년 7월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폐교재산인 가양초등학교 비금분교 소유권을 남양주시에 이전하고, 그 대신에 송라초등학교 운동장과 진출입로 등 교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매입 비용 약 51억 원을 절감하고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 다른 일례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은 2023년 9월에 도 내 공유재산과 군 폐교재산인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 건물과 부지를 협의를 통해 교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영월군은 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한 후에 친환경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셋째, 폐교재산 중에서 활용가능한 개별 단위의 수목(樹木) 및 부대시설물 등을 다른 학교 또는 산하 교육기관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일례로 대구시교육청은 폐교 네 보존가치가 있는 우수한 수목의 폐목 처리를 방지하는 등 녹색환경 보존 및 교육재정 효율화에 활용하기 위해 2007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달성군 가창초등학교 우록분교의 운동장을 활용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나무은행은 여러 학교에서 보유 중인 수목을 각종 공사로 인해 제거해야 할 경우, 학교나무은행으로 옮겨 심은 후에 향후 수목이 필요한 학교나 교육기관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최근 4년간 65개 학교ㆍ기관에 247그루의 수목을 재활용 이식해 약 6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154그루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시설규모가 큰 대학교의 폐교재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가 주도하여 지역성장발전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특성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막대한 대학 부지 매입비용 및 시설물리모델링 소요비용 등 현실적인 재정문제 탓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색하는 폐교재산 활용방안 모색은 초기 구상단계에서 대부분 중단되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 강진군은 2012년에 폐교한 대학인 성화대를 전면 리모델링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기지를 구축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계획은 2023년 7월에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약 330억 원을 확보했다. 강진군은 이 사업을 통해 강진만의 차별화된 문화와 4차산업 기술을 융합한다는 비전을설정하고, 스타트업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등 기업 거점공간을 마련해 민간투자 촉진 및 정주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 사업'을 추진중이다.

다섯째, 폐교재산 매입자 또는 임대(대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리스크(risk)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폐교재산 매입자 또는 임대(대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사업리스크(risk)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잦은 민원 발생 등이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약등기로 10년 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 시설·주민소득증대시설 등으로만 활용이 제한된다. 그밖에 폐교재산 운영·관리가 소홀하거나 10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데 부담이 크다. 따라서, 폐교재산 활용에 따른 민원 해소, 폐교재산 활용 시설용도 확대 및 활용목적 변경에 대한 완화 등을 위한 법률적·행정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여섯째, 전국적으로 지방소멸화 심화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여 생활SOC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미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 관계부처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2024.7.18.)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위해 관할 내 미활용 폐교 사용을 희망할 경우교육청(지방교육청)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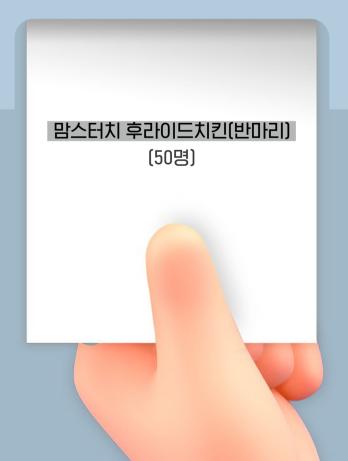
방침이어서 향후 추진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논거한 바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방소멸화 심화 지역 내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은 지역성장발전 및 지역활력증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교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지역개발 및 수익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止揚)해야 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지역성장발전에 목표를 두면서 폐교재산이 지역사회 화합과 소통의 장(場)으로 거듭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지방시대 매거진 구독하고 치킨받자!

신규구독 이벤트 당첨자발표







## 신규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

고○하(1080)	김○용(4845)	박○호(6126)	이○두(1478)	장○아(3470)
곽○미(1686)	김○은(0392)	박○호(8006)	이○봉(7904)	장○영(3029)
권○식(9057)	김○정(3207)	박○훈(8873)	이○선(1925)	정○영(6564)
김○미(6992)	김○진(1080)	서○영(2080)	이(3126)	정○진(2259)
김○범(0287)	김○한(5454)	석○옥(7230)	이)은(2206)	최○희(3323)
김○석(5780)	문(7337)	오○민(6212)	이○철(0981)	현○우(4527)
김○선(5492)	박○랑(1415)	오○정(0063)	이(현(0072)	홍○길(0167)
김○실(2594)	박○만(0751)	윤○빈(3945)	임○경(0916)	홍○남(0176)
김○연(8494)	박○배(1394)	윤○철(0888)	임○용(1518)	홍○은(4029)
김○영(0287)	박○영(3327)	이○남(4458)	임○훈(8172)	홍○표(1216)

※ 경품 발송은 지방시대매거진 9월호가 발송되는 9월 10일(화)이며 연락처 오기입으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재발송 되지 않습니다.



##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9월호는 '대전광역시'편으로 제작되었다.

『시ㆍ도지사의 칼럼』은 이장우 시장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4년 역점과제』로는 「미래개척,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전」, 「문화활력으로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대전」, 「생활안전, 더 나은 삶을 함께하는 대전」, 「공간혁신으로 삶의 공간이 더욱 빛나는 대전」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대전광역시 우수사례』에서는 「이시축제, 5년 이내 아시아 1위·세계 3대 축제 반열 꿈꾸다」,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선정.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거듭 기대」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 소식』으로는 「교통 불편 민원 '대전시의회 신속 해결'」, 「특별재난피해지역 선포 의회 차원 적극 지원」,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대전이시축제, 대전지하철 안전 우리가 지킨다」를 소개한다.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생체 내에서 살아있는 세포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올인원 일체형 생체현미경(IVM)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아이빔테크놀로지 김필한 대표를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우리나라 빈집정비에 관한 제도 고찰과 정비·활용 방향 설정"과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10월호는 '강원특별자치도' 편으로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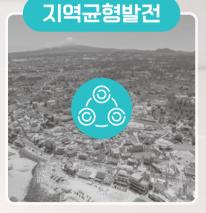
## 기속가능 "기방정부" 실현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